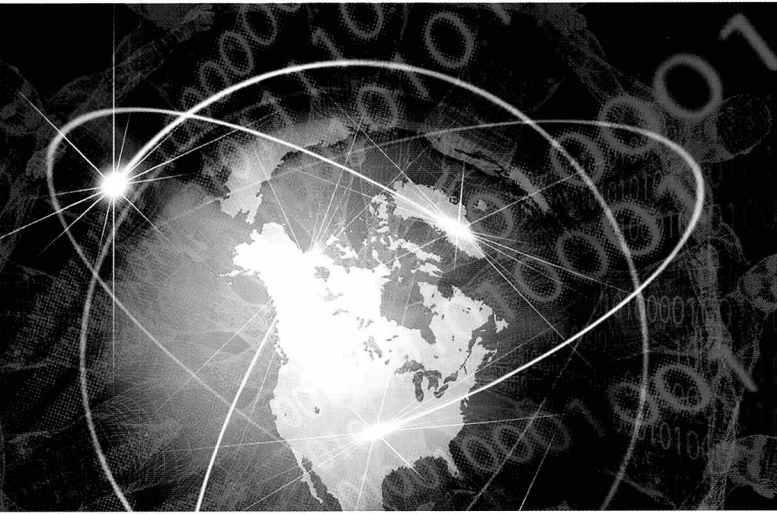


차기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우선과제

박창현 / 전경련 사업조사본부 선임조사역



연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 및 언론 매체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분야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 및 우

선과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정부가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 CEO 중 20%가 경쟁력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 중에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 부문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각종 규제조치가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현재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도, 공정공시제도 등 우리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들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정부규제 개선, 산업기반 강화 등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개선과제들 또한 정책역점 분야로 지적되었다. 오래전부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다, 정부 또한 막대

한 예산과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지적일 것이다. 한편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부문이 규제와 산업기반 부문보다도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산업현장과는 괴리된 대학 교육의 비현실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례없는 고실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현실도 이러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개혁, 노동경쟁력 확보, 금융기반 강화, 공공·재정효율성 증대 부문은 각각 6.3%~9.5%로 중위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시급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반면 국제활동 및 협력 강화(2.0%), 복지·환경 정책(1.0%) 부문은 응답률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부문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 되었거나, 무리한 정책수단의 시행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역점 부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우리기업의 CEO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개선과제는 ‘조세 및 준조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었다. 총 15종 637건(2001년 기준)에 이르는 준조세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복적 성격의 준조세를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준조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동남아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조세 및 준조세 인하가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 및 전략적 육성’이다.

많은 CEO들이 가격경쟁력,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고전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장기 산업비전을 수립하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국제경기 변화 및 외국의 견제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존해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는 중국, 동남아 등의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산업의 경우도 국제경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경우도 고부가가치 선박기술은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견제

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높고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육성을 위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 활성화와 고급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은 '중복규제 통폐합 등을 통한 기업규제 최소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총량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중복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네 번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현실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이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발생할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시행시기 또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우선 추진과제로는 '기술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핵심역량 중심의 정부기능 통폐합', '시장 자율기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정착',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지원확대', '평준화제도 폐지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확대',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기된 기업 CEO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열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은 지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부채비율 축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내부의 경쟁력을 튼튼히 해 온 반면, 기업경영을 위한 대외적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고, 임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분명 차기 정부가 최고의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절대 과제라 할 것이다.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보다 특혜적 수혜를 받지 못할 지라도 최소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햇빛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살아남기 위해 햇빛을 찾아 가지를 뺏는 것처럼, 기업도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마련이다. 곧고 튼튼한 나무처럼 우리기업이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인위적으로 햇빛을 가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을 차기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